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정재현



세종시 법안은 백년지계(百年之計)인가, 아니면 권의지계(權宜之計)·아침, 저녁으로 시류에 아합하면서 즉흥적이고 편의적으로 내놓은 계획인가.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자칫 국론 분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종시 원안을 백년지계로 보는 측이나 권의지계로 보는 측의 주장 모두 나름대로 일리(一理)가 있는 말이다. 찬반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행정 효율성, 도시의 자족성, 국가안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등은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결과 안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원칙 따르는 게 순리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보자. 원안 수정안자들은 세종시까지 생기면 정부기관이 4군데로 나누어져 행정의 비효율성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원안 고수론자들은 지금과 같이 교통·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거리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행정 효율성을 구실로 행정기관의 이

전을 반대하는 것은 기실 서울 중심의 통치구조가 가지는 국가행정의 심각한 비효율성을 방지하려는 주장에 다를 바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렇듯 세종시를 둘러싼 찬반론은 각기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다만

세종시에 드리운 먹구름

어느 쪽이 더 세종시를 객관적·중립적·역사적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 또한 왜곡과 과잉이다. 이 밖에 근거해 주민 이주와 토지 보상이 이뤄졌고 지방공사를 거쳐 일부 청사의 건설도 시작했다. 따라서 세종시는 헌법과 정치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정부정책이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인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

은 대선기간은 물론 취임 후에도 행정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 않은가. 집권당인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의 핵심인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국력낭비는 제쳐놓고서라도 정부의 법치와 정책의 신뢰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명품도시 건설이 행정부처 이전을 통한 행정복합도시 건설 방안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법안으로 확정된 계획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관에 그 대안이 아무리 훌륭함들 과민 국민이 신뢰하고 따를 것으로 생각하는가. 국가경영에 신뢰와 법치보다 중요한 덕목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세종시 논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세종시에 드리운 먹구름이 머지않아 혁신도시에도 덮칠 것이라든가, 결국 세종시가 돌아오는 꿈을 보고난 뒤에 이전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

기관의 이런 폼수가 정부·여당과 사전 모의(?)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까지 마련하고서도 부지매입을 미룰 이유가 있겠는가. 세종시는 혁신도시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신뢰·법치 훼손 안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세종시는 물론 혁신도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시의 예매보호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논란에 따른 국론분열과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행정도시를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만든다고 해서 고향을 내주고 나니 이제는 다시 안 하겠다고 한다. 정부 정책이 원래 이런 거냐?" 정부·여당은 세종시 이후 원주민들의 이 말을 결코 가벼이 흘려 들으려 안 된다. "백성들의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공자(孔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나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접자. 지금은 어떻게 하면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점진적으로 단점을 보완해 국가의 백년대계로 만들 지에 국론을 모을 때다. <논설실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류동훈



풍성한 수확철이다. 올해는 태풍도 없고 가뭄도 적어 들녘이 풍년이라 한다. 황금 들녘에 희망이 넘실거리건만 여기저기서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가득하다는 언론보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광주를 비롯한 도시에 사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고향에 전남의 농촌이고, 또 부모님이 여전히 농사를 짓고 계신다.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지만, 형편이 따라 주지 못해 못하면서 항상 마음 한편에는 죄

인 체험행사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필자가 광주 하남농협도 방문을 해 보았는데, 그곳 담당자들 역시 얼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이야기 하며 그곳에 계신 분들의 안부를 묻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정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많은 회사들이 농촌과 1사1촌을 맺어 가지만, 지속적인 구제적인 성과를 내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필자가 모르는 것 같

'1사1촌' 활성화로 농촌 살리자

송스러움으로 살아간다. 최근 전남 강진 읍면천 읍지마을에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간직이 있다. 친환경 쌀농사로 깨끗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농약을 치지 않아서 그런 지 황새가 날아다니고, 맑은 계곡에서 송사리가 헤엄치고 다녔다. 햅쌀로 지은 밥은 광채가 나면서 맛이 고소해 밥을 자주 퍼가게 했다. 폐교를 활용하여 잔디밭으로 만들어서 축구나, 축구 등 공놀이를 즐길 수 있고, 부대기 있어 각종 행사를 하기도 좋았다. 뜻뜻한 방은 맥반석 찜질을 하는 것처럼 개운해 나중에 가족을 데리고 다시 한번 또 오고 싶었다. 그곳 체험장을 운영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1사1촌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도시의 회사 1개가 농촌 1개와 자매결연을 맺어 체험 행사를 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것이다. 읍지마을은 광주 하남농협과 수자원공사와 1사1촌을 맺어 지속적

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인 교류와 성과에 대한 관심을 적게 가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도시민들 마음에 농촌의 풍성한 정이 가득하여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추억을 함께한다면 직장 문화도 훨씬 풍요로워 질 것이다. 언론은 1사1촌 사례를 집중 발굴하여 재미 있고, 애뜻한 사연들을 시민들에게 많이 소개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좋은 사례들이 나올 것이고, 1사1촌을 맺어만 놓고 사진만 찍고 끝내 버리는 많은 회사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며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사1촌 사업의 핵심기초는 상호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 역시 도시민을 행복하게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할 때 1사1촌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끊임없는 지역민들의 자기개발로 진절하듯 독특한 지역 문화를 선물해 주어야 한다.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일자리 사업단 본부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현금영수증 기피하는 동네가게 가기 싫어져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집 근처 감자탕집에 가서 저녁 외식을 한 뒤 아내가 계산하는 걸 보고는 애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함참만에 나온 아내의 얼굴이 붉어 푸르러 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식당에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구하자 식당 주인이 "식당에서 밥 한 공기 팔아서 몇 푼 남는다고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느냐"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끊어달라고 재차 요구해서 마침내 받아서 나오는데 그 뒤 통수에 대고는 식당 주인 아줌마가

"그 아줌마, 참 아박하네"라며 한마디 하더라는 것이다. 화가 나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며 아내를 여전히 씩씩겨졌다. 우리 사회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왜 매사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가. 그래도 시민들은 대형 SSM 때문에 힘들어 하는 서민층 동네 상권을 지지해 주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영업을 한다면 정말 손님이 대령 마트로 죄다 옮겨간다는 걸 명심해 주기 바란다. <▲이진경·광주시 북구 운정동>

기고

이경진



최근 영광원전 4호기에서 열전달 완충관 이탈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사고가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간단한 질문이지만 답변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원전이나 열전달 완충관, 안정성, 사고등급 등의 전문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열전달 완충관이 '갑기를 내는 곳'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갑기가 어렵다. 열전달 완충관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원자로가 충격을 받는 것은 아니며, 원자로가 충격을 받았다고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설치한 이유는 안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체의 본질은 '원전의 안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전달 완충관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에 있다. 열전달 완충관이 이탈된 사실을 원전

영광 원전 4호기 사고를 보는 시각

우리 집 아이는 유달리 추위에 약해서 겨울이면 감기에 잘 걸린다. 그래서 겨울에는 갑자기 한파가 밀려올 것을 대비하여 항상 마스크를 써워서 내보낸다. 마스크는 찬 공기가 곧바로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열전달 완충관은 마스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안전상의 이유로 10년 한번 이하로 원자로에 주입되는 찬물이, 원자로 구동열을 열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물론, 마스크 안 쓰고 외출했다고 반드시 감기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나는 겨울이면 꼭 마스크를 써워서 아이를 내보낸다. 어쨌든 마스크가 우리 아이의 건강에 도움을 줄 테니까. 열전달 완충관 이탈사고와 관련한 당국자의 발표는 "미미한 사건이며 원전의 안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식이다. 맞는 말이지만 공색하다. 공

운전 중에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구멍난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꼴에 다름 아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세 차례나 열전달 완충관 이탈 사고가 있었다. 처음의 사고는 경험 부족과 기술 부족 때문이었다고 치더라도,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같은 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했는데, 제대로 된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 원자력전문가 집단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기관에 책임이 있다. 개미구멍이 큰 저수지 뚫을 허뚫다는 말이 있다. 정부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서는 개미구멍을 동굴만큼 크게 보는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그만 사고와 사건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풀어감으로써 개미보고 놀라는 국민이 없도록, 반성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 교수>

범죄 쉽게 빠져드는 '가출 청소년' 대책 시급

며칠 전 TV방송에서 극악한 한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고 놀랐다. 10대 가출 청소년 중 여학생이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한 것은 남자들로부터 성적 요구라는 것이다. 당장 돈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가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을 따라다니거나 다른 성인 남자들 틈에서 배고프고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내용은 거리의 10대 청소년들 대부분이 원조제나 매춘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니 남자 아이들의 경우 주유소나 은단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20만~30만 원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아 결국엔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지적한 국회의원은 가정을 떠나 독립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은 미국 등 서구 사회가 경험했던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것이라면 서 이에 따라 범죄와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가출은 물론 나쁜 거지만 어쨌거나 가출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리의 청소년들을 도울 어떤 제도라도 마련됐으면 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는 거리의 아이들이 없게끔 소망한다. <▲정미현·광주시 광산구 북동동>

시설

영광원전 핵연료봉 파손 예상일 아니다

영광원전 4호기에서 핵연료봉이 파손되고 열전달 완충관이 이탈한 채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고는 한국표준형 원전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영광원전은 지난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 11차 계획예방정비 첫날 상당수가 절단된 핵연료봉 2개를 발견했다고 한다. 13일에는 저온의 비상냉각수를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 주입할 때 발생하는 열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인 열전달 완충관이 이탈된 상태로 원자로 하부에서 발견됐다. 영광원전 측은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에 발견돼 방사능 물질의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가동 중에 발생했음에도 이를 곧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예방 정비 때에야 찾아낸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광원전의 안전점검 체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한 것이

다. 만에 하나 사고기간 중에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어쩔 뻔 했겠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영광원전은 그동안 잦은 사고로 가동 중지돼 불안감을 더해 왔다. 최근 국감자료에 따르면 영광원전은 지난 4년간 14건이나 가동이 정지됐다. 국내 원전 4곳 가운데 울진원전의 2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핵연료봉 파손과 열전달 완충관 이탈이라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즉각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국내 원전의 안전확보와 운영실적 수준은 세계 최고일 정도로 완벽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984년 발생한 옛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원전의 안전은 한 치의 실수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광원전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내부 안전점검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생태보존·수익창출 기대되는 갯벌연구소

전남도가 갯벌보존과 개발을 위한 국제 갯벌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박종영 전남지사는 19일 "전남에 국제갯벌연구소 설립해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갯벌보존과 활용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갯벌연구소 설립의 취지는 단연 전남이다. 전남에는 전국 갯벌의 40%가 집중돼 있다. 여기에 과거 갯벌을 매립해 농토로 활용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보존에 주력하는 등 다양한 경합도 축적돼 있다. 1970년대 이후 갯벌은 개발의 대상이었다. 간척사업으로 최근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143배에 달하는 갯벌이 사라졌고 서해안 해안선의 40%가 지도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간척 덕분에 얼마간의 땅은 얻었으나 값으로 환산하기 힘든 갯벌을 잃은 것이다. 갯벌은 각종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정화하는 동시에 철새에서 수생 동식물까지

먹여살리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여기에 갯벌은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자원으로 손색이 없다.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갯벌에서의 굴과 해삼 양식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꼽힐 정도로 건강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어 체험형 관광지원으로도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갯벌 살리기 움직임이 활발하다. 해일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높은 독을 쌓아야만 했던 네덜란드는 최근 독에 구멍을 뚫어 간척지를 갯벌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민과의 갈등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차질없는 갯벌보존을 위한 국제규모의 연구소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에 세워질 국제 갯벌연구소가 생태보존과 고수익창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심축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간척이란 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빼내 농토나 산업부지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작은 땅덩어리에 고민했던 네덜란드나 덴마크, 산업부지 확보에 열을 올렸던 독일 등은 1900년대 초반까지 대대적인 간척사업을 벌인 국가들로 알려진 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일찍부터 갯벌의 소중함을 깨달아 1930년대부터 간척 사업을 중단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법으로 정해 모든 간척사업을 금지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2001년부터 방조제를 부수고 갯벌을 복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뿐만 아니라, 갯벌의 50% 이상이 훼손된 미국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만2천140km에 달하는 갯벌 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50년간 갯벌의 40%를 잃은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생긴 제방이나 육지화한 땅을 허물어 간척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이른바 역간척(逆干拓)이

다. 역간척의 핵심은 간척한 땅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간척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다. 그만큼 생태적·경제적으로 갯벌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세계적인 과학자본인 '네이처'도 갯벌의 가치가 같은 면적의 농경지의 100배에 달한다고 역간척에 힘을 더 해준다. 지역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역간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전국 15개 시·군 가운데 81곳이 역간척을 희망했고, 그중 전남지역이 42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정부가 첫 역간척 대상으로 선정 한 진도군 소포리 대흥포를 비롯해 장흥·고흥 등 대부분의 사업이 무산될 위기나 보류상태에 처해 있다. 사업에 따른 주민보상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복원대상지를 조사했다면 응당 이를 풀어야 할 쪽도 정부다. </이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역간척(逆干拓)



Table with 2 columns: 광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